

서울 공화국 : 예로부터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들어서도 이 현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수도권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했습니다. 면적이 대한민국 전체의 18.9%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총생산은 국내총생산의 53%이고, 100대 기업 중 91개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많은 것이 수도권에 쏠려있습니다. 수도권은 초과밀화로 몸살을 앓는 반면에,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는 광역시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 대표적으로 광역시인 울산광역시보다 일반시인 수원시 인구를 초과하였고, 2대 도시로 알려진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구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울의 위성 광역시로 여겨졌던 인천은 현재 급속히 성장해 지역내 생산이 부산을 추월하는 등, 제2의 광역시를 넘보는 중입니다.

수도권에 쏠리는 인구의 대다수가 청년층인데, 이들은 일자리 문제와 각종 인프라 문제로 수도권에 거주하길 희망하고, 반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고자 하는 청년은 소수입니다. 자연스레 지방은 인프라 부족, 인력 부족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수도권은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집값과 생활비에 과하게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출신, 수도권 출신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스펙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어느새 우리 일상 속 언어에서 “여의도 몇 배 면적”, “서울 명시 없이 ‘2호선’이라 하는 서울 위주의 사고방식이나, 각 지역을 특산물로 비하하는 등, 과거 영호남 갈등을 넘어선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새로운 차별 구도까지 등장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후보님들께서 지방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후보님들의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을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해보자 합니다.

### 후보별 공약

후보별 공약	
이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수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기능 확장 및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li> <li>- 대통령 2 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li> </ul> </li> <li>● 4대 메가시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li> <li>- 대구, 대전&amp;세종, 광주에도 메가시티 추진</li> </ul> </li> <li>● 첨단산업 중점도시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 - 의료 헬스케어,</li> <li>- 충북혁신 - 태양광</li> <li>- 오송 - 바이오</li> <li>- 전주 - 농생명,</li> <li>- 광주 - AI 등등</li> </ul> </li> <li>● 공공기관 추가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목표</li> </ul> </li> <li>● 지방 이전 민간 기업에 법인세, 기업 상속세에서 혜택 제공</li> <li>● 기본소득 지역 화폐로 제공</li> <li>● 지방대학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국립대에 5400 억원, 지방 건전 사립대에 3000 억원 지원</li> <li>- 교육부 담당 지방대학 정책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자생력 강화 유도</li> </ul> </li> </ul>
윤석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산업벨트 조성, 확대 및 청년 창업기지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송 바이오벨트</li> <li>- 대덕 과학단지</li> <li>- 충북혁신도시 신 산업벨트</li> <li>- 익산 푸드폴리스 등</li> </ul> </li> <li>● 지역산업과 연관된 지방대 학과 등록금 전액 지원</li> <li>● 서울권 대학의 지방 캠퍼스 설립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 공동캠퍼스에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등 대학 유치</li> <li>● 동해남부/충청권 광역철도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서울 위주로 운영되는 광역철도를 지방 광역시와 그 위성도시에도 설치</li> <li>- 울산-부산-경남의 동해남부 광역철도 확대</li> <li>- 대전-세종-충북의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li> </ul> </li> <li>● 통합보건소 운영으로 농어촌 지역 1차 의료 강화</li> <li>● 민간기업의 자율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및 민간 주도 기업 지방 이전</li> <li>● 지역별 교육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 도약 디지털 스쿨 설치</li> </ul>
안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통한 광역경제권 모델 구축</li> <li>● 5대 광역경제권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광역철도 확대</li> </ul> </li> <li>●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을 같은 지역권에 설치하여 효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청을 대전에 설치하여 대덕 연구단지와의 연계성 강화</li> </ul> </li> <li>● 4차 산업 관련 특성화 대학 지방 설치</li> <li>● 중앙과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연방제형 지방자치</li> <li>● 부가세·소득세·법인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 공동세 도입</li> </ul>
심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가시티'가 아닌 전국 균형발전으로 탈수도권 전략화 및 수도권 복제식 지역 개발 방지</li> <li>● 중단된 300여 개의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을 다시 추진</li> <li>● 국회, 대법원등 권력기관 지방 이전</li> <li>● 시군구 통폐합으로 혁신도시 70개 설치</li> <li>●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10만개 마련</li> <li>● 전국 어디에서나 주거와 교통, 교육과 의료, 그리고 일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된 도시와 지역을 추구하는 '지역우선전략' 추진</li> </ul>

## 좋은 공약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둘 다 언급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거점 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부-울-경의 또 하나의 거대한 자생 가능한 경제권을 형성하여 청년층이 부산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도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휴스턴-댈러스 등의 서로 떨어져있는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 도시가 존재합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프랑스,독일의 경우도 수도 파리, 베를린 뿐만 아니라 거대 도시인 리옹, 마르세유(프랑스), 쾰른,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독일) 등의 거대 도시가 수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도시들을 모델로 참고하여 부-울-경을 수도권과 큰 차이 나지 않는 거대경제권으로 성장시키고, 그 외 다른 광역시들도 규모는 다를지언정 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과 청년층의 비수도권 이탈이 완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첨단산업 중점도시와 산업벨트 형성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도 이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고, 이와 연계된 연구단지와 교육기관이 위치할 수 있다면, 자연스레 청년 취업 인력과 연구 인력, 대학 진학 인력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광역철도망 확대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거점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인근 도시에서 거점 도시까지 이동이 편리해야 하는데, 정시성이 잘 지켜지는 교통편인 광역철도망은 수도권의 경우, 1호선이 수원, 인천까지 개통한 것이 1974년인 것에비해, 부산 광역권의 경우 2016년에 최초로, 그리고 이웃 도시인 울산으로의 연장은 2021년에서야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광역권의 교통망 확충은 도시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고, 그중 광역철도망 확대는 필수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경권, 대전-세종권의 광역철도망도 형성되면 그 도

시들이 자체적으로 하나의 거대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부족한 공약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두분 모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공공기관이 전국 각 도시, 특히 혁신도시 위주로 분산이 되어있는데,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대표적으로 진천혁신도시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부족해 의도와 다르게 2019년 기준 44%가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주변 상권이 목표만큼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혁신도시의 퇴근시간대마다 통근버스가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이 뉴스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목표하는 지방균형발전이 어려울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메가시티가 아닌 전국 균형 발전”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각종 인프라와 공공기관, 기업들을 이전하는 시도가 현재까지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 폭증만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같은 메가시티에 익숙해진 청년들이 그보다 작은 중소도시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만족할 만한 인프라를 전국 여러 곳에 형성하려면, 메가시티 정책보다 더 많은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후보들의 메가시티, 거점 도시 공약의 장점과 융합한 정책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지방 캠퍼스 확대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은 ‘인서울’이나 경기도 이나도 입결에 영향을 줄 만큼 기존의 수도권vs비수도권 구도와 다르게 서울vs나머지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성균관대처럼 인문 캠퍼스 - 서울, 자연 캠퍼스 - 수원으로 잘 정착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대학에서 지방 캠퍼스 설립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지방 캠퍼스로의 분산이 쉽지 않습니다. 캠퍼스를 옮기는 것은 거주지를 옮기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학 주변의 인프라, 주변 대학과의 연계성까지 바뀌는 등 대학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나온 세종 캠퍼스타운의 경우, 만일 대학이 세종 캠퍼스를 설치하는 것을 통해 정원이 변하고 입결이 변한다면, 학생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좋은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취지이지만, 많은 학생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캠퍼스 이전 정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